

새만금, 도민과 함께... 민관 협력 간담회

도, 새법위·지역 기업·소상공인 등과 현안 공유 및 협력 논의

내부개발 가속화·투자유치·기반시설 확충 등 민간 제언 청취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사)새만금사업법도민지원위원회(이하 새법위)와 군산지역 기업인·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사업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정 전반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개발 현장의 목소

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민관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내부개발 가속화, 기업 투자 유치, 도로·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지역 기업과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을 향후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민관이 공동으로 새만금의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이날 간담회 참석자 다수가 지역 소상공인인 점을 고려해, 현재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정책도 함께 소개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회생 보듬자금, 저신용 특별보증, 온라인 판로 지원, 카드수수료 감감, 전북년명가 육성 등 총 18

개 사업(2,161억원 규모)에 대한 주요 내용을 참석자들에게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새만금사업은 전북자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사업으로, 민과 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새만금을 글로만 미래산업의 실증도시이자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소통하며 새만금 사업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오늘 '제1회 JB생활경제포럼' 개최

전북자치도민회 중앙회 "실생활 도움 되는 정보 나눔"

총무 부회장·운영 부회장 등 핵심 집행부 인사 단행도

전북특별자치도민회 중앙회(회장 곽영길·사진)가 핵심 집행부 인사를 단행하고, 오는 7월 7일 제1회 JB 생활경제포럼을 개최한다.



도민회 중앙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민회 중앙회는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서울장학숙 회의실에서 '제1회 JB생활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도민회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단 및 임원진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

총무 부회장은 김대훈 전 전북도민회 사무총장이, 운영 부회장은 법부법인 화우 고문인 조용태 씨가 임명됐다. 사회·봉사 부회장에는 선전지산업 대표이자 산상고동화회장으로 활동 중인 소병문 씨가 선임됐다.

이 외에도 대외협력 부회장은 이우형 에이치엔케이홀딩스 감사, 사법·행정부 부회장은 이인열 법무법인 대륙아주 수사대응 고문, 홍보 부회장은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겸 변리사가 각각 임명됐다.

/이만호 기자

사무처장에는 박정 총무과장이 승진·임명됐으며 도민회중앙회의 실무 운영을 총괄하게 됐다. 고문에는 이인열 용인대 객원교수가 임명됐다.

도민회 중앙회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발전과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도민회 중앙회는 오는 7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전북서울장학숙 회의실에서 '제1회 JB생활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도민회 명예회장, 고문, 부회장단 및 임원진이 참석하는 가운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

총무 부회장은 김대훈 전 전북도민회 사무총장이, 운영 부회장은 법부법인 화우 고문인 조용태 씨가 임명됐다. 사회·봉사 부회장에는 선전지산업 대표이자 산상고동화회장으로 활동 중인 소병문 씨가 선임됐다.

이 외에도 대외협력 부회장은 이우형 에이치엔케이홀딩스 감사, 사법·행정부 부회장은 이인열 법무법인 대륙아주 수사대응 고문, 홍보 부회장은 김규동 법무법인 메리트 변호사겸 변리사가 각각 임명됐다.

전북자치도-시군 부단체장 회의 개최... 민생 현안·협력 대응 총력

14개 시군, 도정 주요 현안 공유·정책 공조 체계 강화

소비쿠폰 지급·공공요금 안정 등 민생현안 집중 협의

전북자치도가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 실행력을 높이고 시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14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먼저 지방공공요금 안

정관리, 착한가격업소 확대, 휴가철 바가지요금 근절 등 실질적인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민생경제 지원 차원에서는, 소비 위축 해소를 위한 도민 대상 소비쿠폰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군에 가용 재원을 활용한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지급 대상자 및 규모 파악, 지역사랑 상품권 운영대행사와의 사전 협의 등

실행단계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체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도-시군 공동결의문도 체결했다. 지역 건설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협력 사업 추진과 제도 개선을 함께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지난 6월 도와 14개 시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사랑도민제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군 간 상호기부율 독려하고, 도의 전북 출신 대상 홍보를 확대해 '전북사랑' 인식 확산과 기부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단체장 주제 T/F팀 구성·운영을 요청했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를 넘어 개최지가 되기 위해 도민 공감대 형성과 전방위 홍보도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 점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모두의 광장 플랫폼 홍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탄소중립포인트제 기부금 모금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협조 등도 시군에 요청했다.

시군에서는 금강의 국가하천 승격, 전라선 입실역 KTX 정차 등 지역현안에 대해 도가 중앙정부에 함께 대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다가오는 축제·행사 시즌에 대비해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 NS 푸드페스타 IN 익산,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켓, 진안홍삼축제 등 주요 행사에 대한 홍보 협조와 도민 참여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는 "그간 도는 경제를 살리고 전북을 바꾸자는 도민의 열망을 가슴에 새기며 현장에서 도전·혁신·성과를 이끌어 왔다"며, "앞으로도 각 시군이 도와 함께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노홍석 행정부지사 주재로 '2025년 제5회 도-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과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법 특례 '어업잠수사' 전국 최초 시범시행

3월부터 군산·부안 등서 진행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열고

연구추진 현황·초기 결과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다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가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인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

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중공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해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4일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시험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추진 현황과 초기 결과를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도 및 시·군 관계자, 군산·부안 어촌계장, 용역기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시험연구는 군산·부안 지역 마을어장(86건)과 어류등양식장(23건)

등 총 109건, 1,519.24ha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1억5,000만원의 도비가 투입됐다. 과학적 조사는 군산대학교가 수행하며, 어촌계는 어업잠수사를 직접 투입해 시험어업을 병행하고 있다.

도는 이번 시험을 통해 어업잠수사 활용 시 기존 방식 대비 약 38%의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3년간의 시험연구를 통해 해수부에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시험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어업인 숙원 해결이 실제로 가능해진 대표적 사례"라며, "어업잠수사 활용이 어업 생산비용 절감은 물론, 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특례가 향후 제도 개선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TP, 지방소멸 대응·연고산업 활성화 위한 워크숍 개최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 연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경상남도 거제시 소노감 거제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연계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순창, 김제, 남원, 장수, 고창 등 전북 시군구 연고산업육

성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경남·전남권과의 조공역 협업을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발효미생물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남원사이오산업연구원, 캠퍼스융합기술원,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등 도내 역

신기관들과 함께 경남·전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총 9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향후 다른 광역권과 협업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2025 부동산 트렌드 쇼 참가

수변도시 개발전략

첫 분양계획 동시 공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근)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부동산 트렌드 쇼'에 참가해,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통합개발계획 변경 내용과 첫 분양계획을 전격 공개했다.

공사는 설립 이후 첫 분양을 앞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변화된 개발방향과 미래 전략을 전시 부스를 통해 집중적으로 알렸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6.25km(189만평)의 면적으로 조성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며,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기업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새만금의 첫 도시(First City)'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사는 산업단지 입주 수요 증가 및 신항만 개발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 중심의 복합도시로 전환하는 통합개발 계획 변경을 단행하였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최초로 공개되는 수변도시의 첫 분양 계획은 공사의 도시개발 실현을 알리는 상징적인 이정표라고 공사는 밝혔다.

공사는 2025년 하반기 중 수변도시 1공구에서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 약 2,700평(8,820㎡)과 단독주택용지 65개 필지 약 1만1,000평(3만5,361㎡)를 경쟁입찰(군생) 및 추첨방식(단독주택)을 병행해 분양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7월 반려견 단속 나선다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 운영... 위반 시 최대 60만원 과태료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날 30일자로 동물등록 자신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동물 미등록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반려견 유실·유기 방지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조치로,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유실·공인, 산책로 등 반려동물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동물등록 의무대상'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시군청 또는 동물등록 대행업체(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반려동물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2m 이하) △배설물 수거 등 소유자의 기본 관리 의무 이행여부가 포함되며, 위반 시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시키기 위해 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단속 기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인식표 착용, 목줄 준수, 배설물 수거 등 패티켓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도, 건강취약계층 8만명 집중 건강관리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폭 강화... 전담인력 103명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8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질원에 특히 취약한 노인, 만성질환자 등은 기존 상시 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어 각별한 건강관리와 예방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14개 시군 보건소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 103 명을 투입해 △직접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 상태 수시 확인 △혈압·혈당 주요 지표 체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지도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근처 무더위 쉼터 이용 안내,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여름철 건강관리법 교육 등도 병행해 취약계층이 실제로 폭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여름철 폭염 대비 주요 행동요령은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폭염특보 시 외출 자제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기 △오후 2시~5시 야외활동 및 작업 자제 △실내의 온도차를 5°C 이내로 유지해 방바닥 예방 △투톤·여지러움·메스꺼움 등 증상이 있으면 즉시 쉼터 등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기 등이다.

/이만호 기자

도, 안전점검의 날 맞아... 물놀이 안전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진안군 운일읍반일암 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과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7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현장점검과 연계해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전북자치도, 진안군, 진안소방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119시민수상구조대, 진안군 수상인명구조동아리 등 50여 명이 참여해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여부 △인명구조용 설치 △구명환, 구명로프 등 구조장비 상태 등

안전 시설물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함께, '안전한버너' 운동과 '안전하세요' 캠페인 홍보도 함께 전개해 여름철 수상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여름철 수상안전 대책 기간 동안 △무더위 쉼터 안내 △충분한 준비운동 △구명조끼 착용 필수 △음주수영 절대 금지 등 기본 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